

# 한국 책임 강조한 美 국방전략… 한미 전작권 전환에 탄력

美 “군사지원 줄여도 北 억제 가능”  
대북 정책 방향 전환 가능성 커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가속화

북핵(北核) 억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한국으로 규정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가 발표되면서,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대북 정책 방향이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을 목표로 하는 한미 전작권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4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NDS 분석에 대해 “북한의 GDP의 1.4배나 국방비를 지출하며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자주국방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적었다.

이어 “확고한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참석자 발언을 들으며 웃고 있다. /뉴시스

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NDS를 공개했다. 이번 NDS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와 서반구를 포함한 본토 방위,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이 미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을 명시했다.

미국은 ‘안보 환경’ 분야에서 미국 본토 및 서반구·중국·러시아·이란에 이어 북한을 5번째로 배치했다. 하지만 북한이 미 본토에 직접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강조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높은 국방지출, 견고한 국방산업, 의무적 병역제도를 통해 핵심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러한 책임 부담 변화는 한반도 내 미군 태세를 조정(updating)하려는 미국의 이익과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주된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앨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새 국방전략(NDS) 발표 직후인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다. 콜비 차관은 27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한다.

콜비 차관 방한 직전에 NDS가 공개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새 NDS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측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 견제에 집중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방어에서 대중국 견제로 우선 순위가 옮겨간다는 의미다.

이럴 경우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전작권 전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는 올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콜비 차관이 국방비 인상에 대해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최근 한미 원자력 협력 정부대표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고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한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곧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에서 ‘대북·대중 견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면 한미 원자력협정의 ‘개정’은 더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 “국민 눈높이 부합 못해” 野 “인사검증 실패 사과해야”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민주 “국힘, 진영 따라 평가 달라져”  
국힘 “검증 책임, 대통령에게 있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가까스로 인사청문회를 치렀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결단했다. 이에 여권에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를 지명 철회한 것은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실패를 두고 사과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

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혜훈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하셨다.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라며 “그러나 국민주권정부의 장관후보자로써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셨고, 신속하게 결단하셨다”고 평가했다.

강 최고위원은 “아쉬운 것은 국민의 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출한 국회의원을, 자신들의 손으로 매장시켰다”면서 “이렇게 철저히 검증할 수 있으면서, 그동안 왜 그러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동일한 인물도 진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이중 잣대가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분명히 밝히셨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인물이라면, 진영 논리를 떠나 통합 인사를 앞으로도 계속하시겠다고 말했다”며 “우리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 그 방법을 계속 고민하겠다. 진영논리가 아닌 국익을 위한 실리적 지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도 SNS에 “사필귀정”이라며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을 평가했다.

박 간사는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마디도 하

지 않았다. 이재명의 ‘이혜훈 원픽’에 국민은 화가 났는데, 엉뚱하게 보수정당 탓을 하고 있다”면서 “청문회에서 이혜훈 전 후보자는 남탓으로 일관했다. 전임 대통령부터 본인이 몸담았던 보수정당은 물론, 남편, 시댁, 아들, 며느리까지 탓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수준이 이혜훈과 똑같다. 민정수석실, 경찰, 국정원, 국세청, 국토부 등을 총동원하고도 감질 세평은커녕 증여세 탈루, 아들 입시특혜, 부정청약, 부동산 투기 등을 하나도 걸러내지 못했다”며 “그래놓고 보수정당에서 과거 공천을 받았다는 동본인 책임은 철저히 외면했다. 후보자

만큼 뻔뻔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간사는 “이혜훈 전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2월 중순쯤 지명 소식을 받았다고 했다. 지명이 12월 28일인데, 2~3주간 청와대는 뭘 했던 건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이혜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인사를 모두 물리치고, 꼭 짚어서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픽’한 ‘이재명 사람’이다. 그리고 ‘이재명 사람’에 대한 검증 책임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당 공천 검증은 정부 검증과 차원이 다르다. 알면서 모른척하지 말라. 국민 호도하지 말고, 당장 국민께 사과하라. ‘꼼수 정치’에 골몰하느라 검증은 하나도 안했고, 국민 분노만 키웠다고 석고대죄하라”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정청대표 ‘1인1표제’·‘조국혁신당 합당’ 두고 파열음

“최고위원들 모르게 합당 논의”  
정청래 “공유 못해 송구” 사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지도부가 추진하는 ‘당원 1인1표제’와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두고 당 내 문제 제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도부 출범 이후부터 불거졌던 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 권력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완료된 이후 친명(친이재명) 황명선·이인주·강득구, 친청(친정청래) 문정복·이성윤 등이 선출되며 갈등을 예고한 바 있다.

정청래 대표는 한 차례 좌절된 당원 1인1표제 개혁을 재추진했고, 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도

입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 여론조사에서 85.3%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1인1표제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등에서 대의원 투표에 부여됐던 가중치를 없애고 권리당원과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하는 방안이다. 친명계 지도부 최고위원은 당원 1인1표제 원칙에는 공감하나, 기계적으로 표의 비율을 맞추면 당세가 강한 수도권과 호남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되고, 취약한 영남 지역의 목소리는 줄어든 수 있다며 반대 논거를 펼쳤다.

정청래 대표가 임명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원들의 토론과 당원들의 참여, 당원들의 의사에 의해서 1인1표제는 이미 확인된 만큼, 중앙위원회 의결절차만 남겨뒀다”고 전했다.

또한 정 대표는 가장 이래 코스피 종

합주가지수가 5000포인트(p)를 돌파했다는 희소식이 나온 와중에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전격 제안해 당 안팎의 논란을 샀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전날(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합당의 전제로 혁신당의 DNA가 보존돼야 하며 민주당의 내부 논란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에 황명선·이인주·강득구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통합을 위해서라도 정청래식 독단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정청래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최고위원들조차 모르는 사이에 합당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 그 절차와 과정의 비민주성을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정 대표는 (합당 제안을) ‘정치적 결단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3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그 결단에 이르기까지 최고위 논의도, 당원 의견 수렴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 최고위원은 정 대표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합당 제안이 나오게 된 구체적 배경을 밝히라고 했다.

정 대표는 합당 제안 다음날인 24일 충북 진천에서 열린 현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러 가지 불가피성과 물리적 한계 등으로 (합당 제안을)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한 “당대표가 먼저 제안하지 않고서는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시간상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었다”면서 “그러나 꼭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혁신당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사가 있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조국혁신당도)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을 두고 당내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정 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절차를 잘 지키겠다고 말씀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